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반미자주운동의 과제

유 영 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분단 및 미군강점 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민족민주진영에서는 올해를 자주통일과 미군철수 원년으로 삼자는 결의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주한미군 영구주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될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침략적 지역동맹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양국은 지난 2년여에 걸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연합전력증강,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및 주한미군 감축 등에 합의하였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외교부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와 국방부 중심의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이 땅의 자주·민중통일의 길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를 진정한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한미양국의 기도를 좌절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한미군 변환의 배경과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핵심적인 반미투쟁의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한미군 변환의 배경과 현황

미국은 눈부시게 발달한 정보과학기술을 군사적 측면에 적용하는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the Military Affairs)을 추진하여 왔다.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에 발표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청사진이 제시된 RMA는 ①첨단과학기술

술을 이용한 무기체계의 개발, ②신속기동 과학군으로의 미군재편, ③적의 핵심부와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작전의 도입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RMA에 부응하기 위해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미군의 ①장거리 투사능력을 높이고, ②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하며, ③육· . . . 병의 통합 운용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RMA와 군사변환을 원활하고 유효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GPR(Global Posture Review)이다. 이는 ①지상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의 축소가 주된 목표인 미군운용의 효율화, ②집중으로 인한 위협 감소와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지의 분산화, ③스트라이커 부대로 상징되는 부대배치의 기동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군의 거대한 변화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용산 및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증강이 추진되고 있으며, 10개의 군사 임무가 한국군으로 이양되고 있다. 또한 미2사단 1여단이 중무장한 제1 여단전투팀(BCT)으로 개편된 데 이어 미2사단이 이른바 ‘미래형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 올 7~ 월까지 2년 가까이 앞당겨 변환될 계획이다. 또한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적 지역동맹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가 한미 양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주한미군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회운동이나 국민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적 저지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지혜롭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미자주투쟁의 과제

1.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이

하 ‘LPP개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12월 1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모든 미군부대의 용산기지 및 수도권 이외 지역 재배치’ 항목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미 국무부의 최근 업무 평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협정들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협정이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협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협상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포기하였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이익과 국가주권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는 집단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담과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긴 지금,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과제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1) 토지강제수용 저지투쟁

우리는 우선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저지하는 투쟁을 평택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막는 가장 유력하고 결정적인 투쟁이다. 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또한 토지를 빼앗기게 되면 생활의 근거 자체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평택주민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투쟁이다. 따라서 그 만큼 투쟁의 강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방적인 토지·환경조사를 완강한 투쟁으로 실질적으로 저지시켜냄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헬기를 띄우거나 미군기지 안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대중적 투쟁동력으로서 토지수용대상 주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불사하고 있고, 사안의 심각성과 부당성이 국민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투쟁은 향후 1~년 내 가장 중심적인 대중적 반미자주화 투쟁의 고리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토지수용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얼마나 이 투쟁에 힘있게 결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투쟁이 토지수용대상주민들만의 투쟁으로 제한된다면 이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한미간 합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추진 강도가 훨씬 쉘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핵심 동력은 아직까지 직접 피해당사자인 토지수용대상주민 2천여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말에 결성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한미양국의 강제토지수용 저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의식적 준비정도와 결속력을 높여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광범위하고 실속있게 꾸려 한미양국의 토지강제수용 기도를 강력한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저지해야 할 것이다.

2) 용산 등 반환기지 매각 저지투쟁

우리는 다음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마련 목적의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매각을 저지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야 하겠다. 정부 예산이 제한된 조건에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재원마련의 거의 유일한 방안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땅장사를 통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방식이 선이전 후반환 방식이어서 우선은 정부 재정이 먼저 투입되겠지만 재원 보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무턱대고 사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정부의 반환기지 매각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제토지수용 저지투쟁이 부지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무산시키는 투쟁이라면, 이 투쟁은 비용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미군 재배치 계획을 어렵게 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의 경우,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서울시 등에서는 민족공원화 또는 생태공원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문제는 환경단체나 문화단체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투쟁 동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투쟁이다.

또한 각 지역 단체와 지자체들은 그 동안의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반환기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도 적극 연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한편, 투쟁의 동력을 확대하여 미군기지 확장저지에도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 역할확대 저지투쟁

1) 현황

한미양국은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설치하여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화,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차관급 ‘고위 전략 대화’를 개설하여 2006년까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미양국은 이들 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동맹에서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해석 및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외로 자유로이 들락날락(in-and-out)하도록 하는 입출입 규정을 제정하며,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2005년 초부터 약 2개월 간격으로 1~년 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SPI 1차 회의를 지난 2월초에 개최하여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별도의 회의에서 신속히 다루기로 한 데 이어 4월 초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 의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물리적 조건(주한미군 재배치,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연합전력증강 등)을 마련하게 된 미국은 SPI와 ‘고위 전략 대화’를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또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방어적 성격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한미동맹은 대북 방어동맹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미국의 전진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군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이 주변국 분쟁에 무력 개입하고 대한민국이 그 전진기지 또는 병참기지 역할을 할 경우 한반도에도 분쟁의 불똥이 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와 사상 최초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나, 전국인민대표대의회에서 ‘반국가분열법’을 통과시킨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제정과 함께 미국이 자신들의 숙원이었던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중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최하위국으로서 대중국 전진기지과 전세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고 공고화되면 그에 반비례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에 역행하며 민족자주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방어동맹 성격의 한미관계를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자주 · 독립운동세력은 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3) 사업과제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특히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배집단 일각에서도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공세적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공사졸업식에서 행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라는 선언을 구체적 현실에서 확고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처럼 점진적 · 단계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저의를 원천 봉쇄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숭미 사대주의에 찌든 일부 국방 · 외교 관료들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조건부 인정’ 등으로 대통령 발언의 한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미국의 주한미군 동북아 분

쟁 개입 의도에 길을 터주는 것을 막는 방책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SPI와 ‘고위 전략 대화’에서 논의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안보공동선언,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회단체들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한미양국의 음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넓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주 · **· 통일운동세력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겠다.** 한미양국이 앞으로 열게 될 관련 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집회, 기자회견, 면담 등의 각종 사업을 조직하고, 각종 토론회, 언론사업 등을 통하여 여론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개폐,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남한방어로 한정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기지 및 시설제공, 병력과 무기의 배치, 이동, 훈련에 대한 주권적 통제장치 마련 및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요구하고, 미국에의 군사적 종속을 허용할 어떠한 상설적인 한미군사협약제도도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군 구조 변환 반대투쟁

1) 현황과 문제점

주한미군은 2006년까지 150개 항목에 걸쳐 무려 110억 달러의 전력투자에 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한해 국방비의 7~ 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주한미군측이 밝힌 전력증강의 핵심은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로 불리는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 SBCT)의 순환 배치다. 이 부대는 고성능 경장갑차량과 전자지휘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신속기동능력과 전투력을 동시에 강화한 첨단부대다. 주한미군은 또 한반도 비축 전쟁예비물자(WRSA) 및 정밀탄약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 최신행 패트리엇 미사일(PAC-3) 추가 배치를 실행하고 있다. PAC-3는 유일하게 개발 완료된 MD무기체계의 하나로서 종말단계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작년 가을 동해에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하였고,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 공군기지에는 작년 9월까지 5개,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기지에는 작년 연말까지 3~ 개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해상 침투하는 북의 특수부대 저지를 목적으로 노후 전투 헬기들을 최신예 'AH-64D 아파치 롱보'로 대체하고, 주한 미7 공군이 보유한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을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장치(GPS)로 정밀 유도하는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하는 한편, 정찰공격용 무인항공기(UAV) 배치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최근 함대 대응 계획(Fleet Response Plan)을 마련하고 해군의 해외 분쟁 지역 투입 능력을 획기적으로 배가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전력증강을 통하여 자신들의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도 정밀한 타격능력과 고강도의 파괴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에 발맞추어 한국군도 전력을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6월, 폴 윌포워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국방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7% 수준으로 한국 정부가 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한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한국도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면서 향후 10년에 걸쳐 24조를 추가로 투입하여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5년도 국방예산으로 2004년보다 9.9% 늘어난 20조 8천 226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증가율 6.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한 미2사단을 올 여름까지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력을 갖춘 이른바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변환시키기로 했다. 미2사단의 UEX로의 변환은 주한미군의 전력구조와 편제를 대북 방어형 불박이 군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과 같은 사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UEX로 변환이 완료되면 미2사단은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이는 미2사단 산하 제1여단이 이미 기존 여단보다 2~ 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 즉, 세계 최초의 '슈퍼여단'으로 재편된 데 뒤이은 것이다.

미2사단 변환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원거리작전' 곧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락시키고, 북한에 대한 초정밀선제공격능력에 날개를 달

려고 하는 것이다. "UEX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의 임무수행도 가능한 최고 5개 여단을 지휘·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긴스 미2사단장의 발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역할 확대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포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은 물론 우리 민족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저지르는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동원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무제한적 군비경쟁으로 내몰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는 물 건너가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미2사단 변환 계획이 갑자기 2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선제공격타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협의하기로 한 지난 2월의 SPI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미2사단 변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정부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고압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행위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위한 준비를 자신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SPI회의 등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여기지 않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 과제

주한미군 전력증강과 군 구조의 변환은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남한의 전력만으로도 북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도 주한미군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그러므로 대북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이 전력을 증강하고 군 구조를 변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계획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긴장 격화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초과잉전력인 주한미군 전력증강 반대, 미국산 무기도입 및 국방비 증액 반대,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전제로 한 군 구조 변환 반대를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성격상 투쟁의 고리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광주 패트리엇 미사일 및 군산 스텔스기 배치 반대 투쟁 등 특정 무기 반입이나 한미연합훈련 시기 등에 맞춰 대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주한미군 역할확대 및 주한미군 재배치 투쟁과도 결합해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